

# 사학의 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

조 정 원

경희대 총장, 사립대학총장협의회 부회장



## 1. 서론

새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들의 염원하는 과제들을 빠짐없이 언급함으로써 국민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다. 교육정책도 물론 그 중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여건의 개선, 컴퓨터교육의 강화, 대입제도의 개선, 능력 위주의 사회 구축, 전인교육의 실현, 사교육비의 절감 등 국가적으로 필요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취임사에 반영된 대통령의 의지는 경제개혁과 교육개혁으로 요약된다. 특히 교육개혁

에 대한 의지는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도 높은 것 같다. 이는 “만난을 무릅쓰고라도 교육개혁을 반드시 성취하겠다.”고 강조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미국의 대공황이 미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계기가 되었듯이, 우리도 최근에 붙어 닳친 위기 상황을 우리나라 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 놓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경제체질 개선과 함께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에서 난국타개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적은 매우 적절하며, 고등교육에 몸담고 있는 우리는 더 큰 책임을 느끼게 된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사학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교육부의 『교육통계연

보』(1996)에 의하면,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347개 중 279개(80.4%)가 사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고등교육을 받는 129만 명의 학생 중 96만 명(74.4%)을 사학에서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사학의존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 사학의 천국인 일본과 미국 고등교육의 사학의존도는 각각 73.5%, 그리고 55.2%로서, 우리나라의 사학에 대한 정책이 곧 고등교육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래의 정보화 사회는 과거의 산업화 사회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산업이 주도할 미래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고등교육의 역할이 훨씬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75%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사학의 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될 것이다. 우리나라 힘의 근원은 교육에 있으며, 우리의 미래도 교육에 달려 있다.

새 정부 역시 이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사립대학을 담당하는 교육자로서 새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하고 싶다.

## 2. 새 정부에 바라는 사립대학 정책

첫째, 사학의 재정 확충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여 주길 바란다. 높은 사학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사학은 그간 방치되어 온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 사학의 평균 등록금의존율은 71.8%로서 일본의 57.8%, 미국의 38.5%에 비하여 매우 높다. 이는 그간 사학이 정부 및 민간단체로부터 소외되어 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사학은 열악한 재

정 상태로 인해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21세기를 주도할 지식산업화 사회에서는 현재의 사학 교육환경으로 훌륭한 두뇌집단의 배출을 기대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교육경쟁력이 가장 높다는 미국의 경우에도 주립대학은 대중적 교육에 치중하는 반면, 사립대학은 소수 정예의 질 높은 교육으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시장경쟁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가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공립학교의 한계를 느낀 미국의 미시간 대학과 버클리 대학이 사립화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GNP의 6% 규모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나, 간접적이지만 효과가 큰 사학지원책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산업체 인력의 대부분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전화·수도 등의 공공요금에 산업체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에 필수적인 교육용 기자재와 대학병원의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면세 혜택(해외 구매시의 관세 면제 포함)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단체 및 개인들로부터 활발한 기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현재는 국·공립대학에 주는 기부금만이 세금혜택)을 포함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둘째, 사학의 자율성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가 시급히 시행해야 할 일은 학생선발과 정원조정에 대한 자율권을 사학에 부여하는 것이다.

무한경쟁 사회에서는 과거의 구태의연한

규제는 불필요하다. 과거 수십 년간 학교별 정원은 물론 학과별 정원까지 명시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경제 및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분야 개척 및 인력수급이 매우 경직되어 왔다. 전체 정원의 자율화 없이 학과별 정원자율화는 학교내 이해 집단간의 대립으로 사실상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전체 정원의 자율화가 이루어져야만 대학내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정원 자율화의 선결조건으로는 학벌이 아닌 실력 위주의 취업을 확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실력있는 자만이 졸업할 수 있는 졸업자격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각 대학은 나름대로의 졸업자격 요건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열린교육 체제를 지향하는 정책이다. 열린교육 체제는 대학 문호의 개방, 대학간 경쟁 유발, 평생교육 체제의 활성화와 관련된다.

대학의 문호를 활짝 개방하는 문제는 위에서 논의한 정원자율화와 연결지을 수 있다. 누구나 원하면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새 정부의 12대 공약 사업 중 하나인 '과외비 대폭경감과 입시난 해소'를 일시에 해결하는 길이다. 뿐만 아니라 사정에 의하여 학업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도 학점은행제 등으로 문호를 개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조직의 전반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는 조직간 이동 가능성(mobility)의 부족으로 조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죽은 조직으로 변하여 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대학에서도 매우 심각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 및 학생에 대한 엄격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대학간 경쟁을 유도하여 학생

및 교수의 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을 펴나아가야 한다.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으로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의 발달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계속 같고 닳지 않으면 고급인력도 쉽게 노후화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이 주도하여 산업인력에 대한 평생교육을 책임지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언급된 원격교육의 적극 지원은 평생교육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넷째, 정보화교육 및 과학교육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대의 산업사회는 또 다른 변혁을 맞이하고 있다. 전자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을 주축으로 한 정보기술의 발전, 통신과 컴퓨터의 결합 등 이른바 정보혁명은 사회·경제의 각 분야에 급속히 파급되고 있으며 경제발전의 새로운 변수로 대두되고 있다.

새 정부의 12대 중점과제 중에도 포함되었고 대통령 취임사에도 강조하였듯이, 과학자 우대정책과 과감한 투자만이 선진과학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길이다. 문제는 정보화교육 및 과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사학의 입장에서는 혼자서 이같은 투자를 감당하기 어렵다. 정부 스스로의 적극적인 투자는 물론 민간기업으로부터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경쟁력이 있는 주요 사학에 산학협동단지를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사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지방 사립대학을 육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이 347개가 있

다. 이들 교육기관이 모두 비슷한 교육과정과 특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영역별, 지역별 특성을 가진 대학으로 육성시킴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교육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제휴 또는 합병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사학 특성화의 일환으로 지방을 대표하는 명문 사립대학의 육성이 시급하다. 과거 정부에서 논의되었던 인위적인 취업할당제, 지역별 인재등용 정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지방대학을 육성시켜 나가는 정책이 적절하다. 인위적 할당제는 새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시장원리의 추구 및 능력위주 사회의 구축이라는 기본정책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방대학을 더욱 폐쇄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각 지방을 대표하는 명문 사립대학을 육성함으로써 지방인들의 긍지를 높일 수 있으며, 아울러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3. 사립대학인들의 과제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사학을 위한 다섯 가지 정책을 새 정부에 제안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학인들의 현재와 같은 자세로는 정부의 지원을 크게 기대할 수 없다. 적극적인 사학 지원을 유도하는 길은 정부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뿐이며, 그동안 스스로 실추시킨 사학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뼈를 깎는 자성이 필요하다. 교육부의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철폐되어야 하지만, 그 규제 속에 안주하면서 자구노력을 게을리했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 역시 과감히 시정하여야 한다.

사학이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사학의 투명한 경영과 스스로의 정화노력이다. 투명한 경영이란, 사학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지원이 확대되고 자율권이 주어졌을 때, 일말의 의혹도 없는 투명한 운영과 이에 대한 충분한 공시를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스스로의 정화를 위하여 자체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공정한 평가결과를 국민들에게 계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이다.

사학의 발전은 우리 사학인들의 어깨에 달려 있다. 국민들이 사학의 발전상과 투명성을 인식할 때, 이들로부터의 지원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우리 사학은 사회의 각 분야와 동떨어진 상아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사학이 사회 전반적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앞장서야 한다. 최근의 국가적 위기상황은 사학의 구조를 개편하고 나아가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

---

조정원/경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Fairleigh Dickinson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석사학위를, 벨기에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9년부터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해왔고 1996년 동 대학 총장으로 선임되었다. 현재 한국국제정치학회와 한국정치학회 정회원이며,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외연수지원실 대학생 해외연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남북통합론』, 『동아시아 국가의 이해-한국, 중국, 일본, 몽골』 등 10여 권이 있고 “한국의 국방정책과 한·중 관계 개선전략”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